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 및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채택의견

| | |
|----------|------|
| 의안 번호 | 1073 |
|----------|------|

발의년월일 : 2002. 8. 27.

발의자 : 이창수 의원의 20인

□ 제 안 이 유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주한미군과 미국의 안이한 사후 수습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개 사과를 통해 주한미군의 신뢰 회복, 나아가 평등한 한미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함.

□ 주 요 골 자

-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 및 유가족에 대한 피해 배상 촉구
- 주한 미군의 1차 재판권 이양 거부 조치 철회 촉구
- 한미 양국 정부에 궁극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조속한 개정 촉구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공개사과및 재판권이양촉구결의문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월 13일 주한미군의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신호순·심미선 양의 압사 사망사건의 경과를 지켜보며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과 평등한 동반자적 한미관계를 염원하는 안산시민의 대표로서 주한미군과 미국의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며 한미간의 상호 발전적인 신뢰회복과 우호증진을 위해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대책을 촉구 결의함.

- 주한미군과 미국 측에 피해자 유족과 우리국민들은 세계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미국의 진심 어린 사죄와 공개사과를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미국은 파월 국무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가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1995년 주일미군이 일본 오끼나와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당시의 미국대통령이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피해자와 일본국민에게 사과하였던것과 비교하여 2002년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우리국민들에게 불신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음.

○ 또한 주한미군과 미국측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가해자 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이양 요구에 대해서도 공무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였으나 1957년 일본여성이 미군 사격연습장 안에서 탄피를 줍다가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주일미군이 1차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다 일본국민의 비판여론에 굴복해 결국 재판권을 포기했던 명백한 사례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의 1차적 재판권 이양 거부는 신뢰하기 힘든 조치임.

○ 이와 같이 여중생 사망사건과 과거 미군범죄의 경우와 같이 주한미군과 미국의 안이한 사후수습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전달하고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주한미군의 신뢰회복을 위해 더 나아가 평등한 한미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함.

1.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배상을 촉구함.

1. 주한미군의 1차 재판권 이양 거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함.

1. 한미 양국정부에 궁극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빠른 개정을 촉구함.

2002년 9월 18일

안 산 시 의 회 의 원 일 동